



## 노동운동, 98년 결산과 99년 방향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1. 개혁 1년의 결산서

#### ① 대량실업

지난 한해 노동자들은 참혹한 시련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다. 우선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들이 아무 잘못도 없이

직장에서 쫓겨났다. 작년 말에 55만 6천명이던 완전실업자가 올해 10월에는 153만 6천명이 되었으니, 1년도 안된 사이에 100만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이다. 여기에 직장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실망실업자와 일거리가 없는 일용노동자, 가족종

사자를 모두 합하면 그 수는 400만명이 훨씬 넘는다고 한다. 쫓겨난 노동자 가운데 그래도 퇴직금과 위로금이라도 받은 노동자들은 당분간 생활할 돈이 있으니 그래도 나은 셈이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회사가 넘어져 돈 한푼 쥐지 못한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들이나 퇴출기업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하루 넘기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밀리고 만 것이다. 이 실업자들의 가족을 모두 합하면 1천만명이 훨씬 넘는다고 하니 그 심각성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정부의 실업대책은 예산도 턱없이 모자랄 뿐 아니라 그 나마도 나열식의 임시방편에 머물고 있다.

## ② 임금 근로조건의 저하

요행히 살아남은 노동자들에게는 임금 삭감과 반납, 노동조건의 파괴 그리고 노동강도의 강화라는 '형벌'이 가해졌다. 경영수지와는 아무 상관도 없이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노동조건을 끌어내리는데 혈안이 되었다.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총의 조사에서 보아도 통상임금은 1.2%가 줄었고 통상임금과 상여금을 낮춘 업체는 전체의 54.5%, 임금을 동결한 업체는 34.6%나 되었다. 통계청에서는 98년 6월 현재 명목임금은 5.9%, 실질임금은 12.4%나 낮아졌다고 발표하였고 한국노총의 조사에서는 IMF이후 노동자 가구소득이 58만 6천

원이나 줄어들었다고 했다. 그 결과로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서 나타난 98년 상반기 기업의 인건비는 97년 상반기의 것보다 2.6%나 줄어든 9.4%로 낮아졌다.

## ③ 빈부격차 심화

이와 함께 가진 사람들은 고금리와 잘못된 세제의 덕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다. 지난 2/4분기 현재 월496만 원 이상 소득자의 평균소득은 655만원에서 1,017만원으로 55%나 늘어난 데 비해 월 55만원 미만자의 평균 소득은 35만 3천원에서 29만 2천원으로 17%나 줄어들었다. 그 대신 상위 20%소득자의 세금은 3.6%에서 1.8%로 절반이나 줄어들었고 하위 80%의 소득자의 세금은 11.7%~17.6%에서 17.2%~25.3%로 늘어났다.

경제위기의 원인이자 개혁의 1차 대상이라던 재벌들과 정치권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재벌개혁은 지배와 소유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고 계열회사의 통폐합과 사업교환으로 마무리짓는데 그침으로써 언제든지 과거형태로 되살아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정치개혁은 아무런 진전도 없이 물밑으로 잠복해버렸다. 이것이 3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루한 '국민의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그리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이라는 목표를 내세워 몰아 부

친 개혁 1년의 결산서이다.

## 2. 1998년 노동운동이 남긴 것

### ① 자본의 파상공세

노동조합들은 숨막히는 긴장 속에 한 해를 보냈다. 사업장 단위에서 사용자들은 재정 금융 진축과 고금리, 공황에 벼금하는 경기 침체를 배경으로 노조쪽에 감내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내세워 선제공격을 펴부었다. 임금이나 고용이냐 선택이 아니라 임금도 깎고 정리해 고도 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 기회에 노동조합을 없애버리거나 기세를 꺾으려는 부당노동행위도 극성을 부렸다. 애써 얻은 성과들을 포기하면서 맷은 고용안정협정이나 단체협약을 깨버리는 일도 자주 일어났다.

이러한 공세에 대해 뚜렷한 대안도 대응의 경험도 갖지 못한 사업장 단위 노동조합들은 노동조건의 개선이 아니라 기왕의 조건을 '지키는 싸움'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일자리 유지와 임금 노동조건의 인하를 맞바꾸는 이른바 '양보교섭'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런 속에서 많은 노동조합들은 치열한 싸움을 전개하였다. 노동부 집계를 보더라도 노동쟁의 건수는 98년 11월 24일 현재 118건으로 97년 한해동안의 78건 보다 40건이나 늘었고 쟁의 참가인원도 12만 9천명으로 전해의 4만4천명

의 3배 가까이 불어났다. 또한 파업일 수도 44만5천일에서 126만 4천일로 크게 증가하였다.

### ② 민주노총의 대응

한편 민주노총은 2월 6일 제1기 노사정합의 후 대의원대회에서의 합의안 부결과 집행부 총사퇴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총파업 철회라는 대혼란을 겪은 후 3월말 제2기 집행부가 들어섰다. 새 집행부는 노사정위원회 불참, 정리하고 과전근로제 철폐, 민주노총 혁신이라는 과제를 내걸었다. 투쟁전술로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기본축으로 하고 여기에 정부와의 직접협상과 노사정위원회에서의 교섭을 결합시키는 방식을 구사하였다. 민주노총의 투쟁은 격렬한 노동절 투쟁을 시발점으로 하여 5.26~27 총파업(241개 노조, 23만 5천명 참가) → 6.5노정합의 → 6.10 총파업철회 및 노사정위원회 참가 결정 → 7.14~16 총파업(94개 노조 20만 8천명 참가) → 7.23 노정합의 및 총파업철회라는 과정을 밟았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55개 민중 시민 종교 사회단체와 함께 '고용·실업대책,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국본)를 꾸려냈고 7월12일 한국노총과의 대규모 공동집회, 11월 8일과 12월 12일의 1,2차 민중대회를 열어 저항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이와 같이 사업장 단위 노동조합은 양보교섭이라는 수십년만에 처음 보는 치욕을 당하면서도 일련의 투쟁들을 통해 완강한 저항력을 표출시켰다. 또한 민주노총은 96/97 총파업 때의 위력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두 차례의 총파업을 통해 노동조합운동의 중심축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하였고 아직 투쟁의 동력이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8년 투쟁에 대해 잘했다는 평가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오히려 민주노총의 기관지인 「노동과 세계」에서는 공공연하게 노동 운동이 위기에서 있다 고 전단하였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 ③ 운동위기론의 대두

많은 사람들은 그 첫 번째 이유를 치열한 투쟁에 비해 일은 성과가 별로 없었다는데서 찾는다. 사실 현상유지라도 얻고 싶은 절박한 소망에 반해 투쟁 후에 남은 현실은 너무도 참담하였다. 고성장 저실업의 경제상황 속에서 10년 넘게 「성과주의」의 관성에 젖어온 조합원의 눈에 노동조합은 무력하게 비칠 수밖에 없었다. 중앙투쟁의 성과물의

시 매우 빤약한 것이었다. 정리해고 과정근로 협용의 대가로 남긴 제1기 노사정합의사항은 물론이고 총파업을 통해 두 차례나 만든 정부와의 합의내용도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다. 제2기 노사정위원회도 논의만 무성했을 뿐 빌다른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그런데도 김영삼정권

때보다 훨씬 더 많은 215명(10월 말 현재)의 노동자와 노조간부들이 구속(158명)되거나 수배(57명)당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총파업을 포함한 제반 투쟁들은 소모전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성과 없는 투쟁에 대중들은 더 이상 투쟁에 따라 나서

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가 운동 위기론의 바탕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투쟁에서 목표로 한 것 가운데 어떤 것을 얻었는가는 1차적인 평가 기준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안팎의 조건과 역량에 따라 목표로 했던 성과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일련의 교섭과 투쟁이 조직력을 키우고 강화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있으며 이것도 아니라면 최소한 운동발전의 가능성 만이라도 확인했는가 하는 점에 있는

정리해고 과정근로 협용의 대가로 남긴 제1기 노사정합의사항은 물론이고 총파업을 통해 두 차례나 만든 정부와의 합의내용도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다. 제2기 노사정위원회도 논의만 무성했을 뿐 빌다른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그런데도 김영삼정권 때보다 훨씬 더 많은 215명(10월 말 현재)의 노동자와 노조간부들이 구속(158명)되거나 수배(57명)당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총파업을 포함한 제반 투쟁들은 소모전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성과 없는 투쟁에 대중들은 더 이상 투쟁에 따라 나서 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가 운동 위기론의 바탕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투쟁에서 목표로 한 것 가운데 어떤 것을 얻었는가는 1차적인 평가 기준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안팎의 조건과 역량에 따라 목표로 했던 성과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일련의 교섭과 투쟁이 조직력을 키우고 강화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있으며 이것도 아니라면 최소한 운동발전의 가능성 만이라도 확인했는가 하는 점에 있는



것이다.

#### ④ 혼란과 '위기'의 정후들

민주노총은 IMF 열달 동안 266개의 조직에서 40,783명의 노동자를 잃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신규조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다 구조조정의 대풍을 막아내기에는 당초부터 역부족이었다고 자위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평가의 초점은 투쟁을 통해 내부적으로 얼마나 조직력을 강화했는가에 모아진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간부들은 1기 노사정협의 과정 이후 균열되었던 조직 간의 화합과 질속력을 복원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어진 측면도 있다고 말한

다. 민주노총의 중앙위원회나 대의원대회는 성원 제우기에 급급하고 하반기에 두 차례나 대의원대회가 유산되었다. 계정도 바닥이 나서 조합원 성금모집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간부들은 운동의 침체에 갈등을 느끼면서 갈수록 힘들어하고 있다. 대부분의 산별연맹은 지도력과 집중력 통제력의 한계 속에서 단위노조의 고충처리에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하지만 산하조직의 불만은 높기만 하다. 금기야는 현대자동차노조의 예와 같이 단위노조가 중앙맹비 납부를 거부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단위노조에서는 간부와 대의원을 말지 않으려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데 반해 고용안정

이라는 비슷한 공약을 내건 임원 선거 전은 여전히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현장조직력은 취약해진 상태에서 일부 현장활동가들은 적전분열의 위험성은 이랑곳없이 자신들의 주장을 전파하는데 열심이다.

이와 같이 민주노조운동은 전반적으로 스스로 강점이라고 여겨왔던 조직내부 또는 조직사이의 질 속력이나 집중력이 극도로 취약해진 상태를 드러냈다. 또한 대부분의 조직단위에서 현장 토론을 통한 대중적 민주적 결정의 원칙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열심히 싸우고 있기는 하지만 이씨 보면 코사 투의 셀램비위원회가 지적한 것처럼 이것저

것 부딪히다가 스스로 지쳐 떨어지는, '지그재그' 방식에 묻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과연 이대로 가면 민주 노조운동은 살아남을 수 있는가'라는 많은 노동자들의 질문은 바로 이러한 민주노조운동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 ⑤ 운동노선 논쟁

이러한 상황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1기 때는 지도부가 잘못해서 그랬고 2

기 때는 방침은 제대로 세웠는데 하부 조직이 안따라줘서 그런 것인가? 지도부가 상황판단을 그르쳐 전략 전술을 잘못 구사한 것이 그 원인인가? 상황변화를 외연한 채 투쟁으로 모든 장애물을 물파할 수 있다는 자만심에 빠진 걸 과인가. 아니면 관료주의와 개량주의 풍조가 만연된 결과인가? 기업별노조 체계라는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한계가 그 근본원인은 아닐까? 만일 이 모두가 위기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가장 주된 것은 어떤 것인가?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아직 공식 의견을 내놓지 않은 대신 기관지인『노동과 세계』

98년 10월 26일차와

11월 23일차에 관련기사와 나름대로의 주장을 실고 있다. 또 월간『노동사회』 98년 9월호, 10월호, 11월호에는 이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들은 운동안팎의 상황변화를 겪으면 후 운동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운동기조를 재정립하고 조직과 활동방식을 혁신해야 한다는 것, 산별노조의 전설을 앞당기고 정치세력화를 서둘리야 한다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남아공의 민주노총이라 할 수 있는 코사 투의 운동전략이 소개되었고 '사회적

민주노조운동은 전반적으로 스스로 강점이라고 여겨왔던 조직내부 또는 조직사이의 질 속력이나 집중력이 극도로 취약해진 상태를 드러냈다.

조합주의'를 새로운 운동노선으로 제창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를 비판하는 글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 비판들은 전체적인 기본틀을 보기보다는 사회적 조합주의를 '사회적 합의주의'(이른바 코포라티즘)나 개량주의 심지어는 '노사협조주의'라고 공격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비판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데 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한편 민주노조운동의 충본산인 민주노총에서는 기관지를 통해 '사회적 조합주의'에 대한 논쟁을 부쳐놓기는 했지만, 스스로의 운동기조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도 내놓지 않았다. 그리고는 조직혁신 방안으로 2기 집행부 출범때 공약이었던 민주노총 임원의 직선제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 3. 무엇을 할 것인가?

민주노총 이갑용 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다섯 가지 요구를 내걸고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고, 민주노총 산하 산별연맹 위원장들이 단식농성에 합류했다. 민주노총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과 지도부로서는 절박한 상황을 돌파해 보기 위해 내린 결단이었겠지만, 단식투쟁을 보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안타깝기만하다. 처절한 사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 조직 안팎상황이 쉽게 풀릴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희망이어야 할 새해는 너무도 어둡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결코 덜하다고 할 수 없는 큰 도전들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재벌들의 빅딜에 이은 구조조정으로 엄청난 정리해고의 태풍이 몰아칠 것은 누구의 눈에도 분명하다. 이들 사업장이 대부분 민주노조운동의 주력부대라는 점에서 민주노조운동이 또 다시 카다란 충격과 혼란에 맞닥뜨릴 가능성은 매우 크다. 정부의 경기회복정책에 힘입어 내년에는 경기가 회복되리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나라 안팎의 불확실한 상황은 이 기대를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있지 않다. 또 경기가 풀린다고 해서 정리해고가 중단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리라는 희망도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그 때문에 내년 임단투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상황변화의 변수도 있다. 새로운 실업자가 급증하고 이 실업대란 속에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데다가, 특히 심각한 취업난에 직면한 40만에 가까운 대졸자들의 동향이 정세를 변화시키는 태풍의 눈이 되리라는 지적도 있다.

#### 조직상태 진단과 현장복원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든 벼랑으로 몰

린 노동자들의 생존 그 자체를 위한 저항은 피할 수가 없고 노동조합은 그 투쟁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내년 투쟁목표와 전술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투쟁목표를 조직 안팎의 조건을 냉정하게 인식한 토대 위에서 물바로게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전체 조직의 상태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평범한 현장 대중토론을 통해 방침을 이끌어 내야 한다. 지도부의 정체인식과 판단에만 의존하여 투쟁의 깃발을 세우고 대중들에게 따라오라고 요구한다면 올해와 같은 혼란과 분열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산하조직이나 현장대중들의 요구나 결정에만 말기고 지도부의 역할을 포기한다면 마찬가지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지도부의 과학적 인식 판단과 현장대중의 의견 요구를 결합시켜 투쟁목표와 방침을 결정하는 민주적인 결정방식의 복원, 이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이와 함께 당면한 투쟁방침은 중장기적인 전략목표에 맞게 세워져야 한다. 왜냐하면 뚜렷한 중장기 운동전망 없이 노동조합을 흩어진 상태로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투쟁으로만 모든 장애물을 돌파하라고 몰아친다면,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현재의 취약한 운동구조를 바꾸어낼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산별노조 건설작업의 '운동'으로의 전환

지도부의 정체인식과 판단에만 의존하여 투쟁의 깃발을 세우고 대중들에게 따라오라고 요구한다면 올해와 같은 혼란과 분열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창립 당시부터 스스로의 강령과 규약으로 산별노조 건설을 내걸었다. 4년 이 지난 지금은 현실의 문제이며 조직혁신의 문제이다. 기업별노조로는 현안 해결은 물론 미래의 희망은 어디서 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별노조의 건설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장 과제이다. 그리고 그 실현 가능성은 이미 전교조와 보건의료산별노조 설립으로 입증되었다. 올해 대학노련이 단일 노조를 출범시켰고, 금속산업연맹을 비롯한 많은 연맹들이 산별노조 전환을 서두르고 있으며 화학연맹과 민주섬유, 상업연맹과 민주관광, 공공부문 노조들이 산별노조 건설의 한 단계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기업별노조의 한계를 깊이 인식한 결과이다. 이에 대해 일

부에서는 산별노조 건설 주장을 '산별 노조 절대화론'이라 하여 비판하고 있다. 산별노조 건설이 교섭형태에만 집착하여 현장대중투쟁을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기업별 노조체계를 그대로 둔 채 당면파제 해결을 위한 현장투쟁만을 고집할 경우 노동조합운동은 노동자계급 전체의 이익과 권리지를 지키고 키워내는 축이 아니라, 제각기 갈라져서 자기 조합원의 이익을 지켜내는 데만 몰두하는 파거의 양상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19세기 숙련공노조처럼 자신들의 이익에만 만족함으로써 노동자계급으로부터 고립된 형태로 남게 될 것이다. 이제 산별노조 건설은 민주노총 차원에서 조직강령과 방침을 결정하여 모든 노동조합이 실천으로 옮기는 '운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운동 목표 기조의 정립과 정치세력화

운동의 목표와 기조를 올바르게 정하는 일은 조직형태의 전환과 함께 노동조합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운동의 목표와 기조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나침반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바깥의 의견을 듣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안을 마련해야 한다. 만일 이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다면 광범한 대중토론을 거쳐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추진 역시 주저 해야 할 이유가 없다. 민주노총은 이미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국민승리21>과 결합하기로 결정하였고 <국민승리21>은 내년 5월 진보정당으로 탈바꿈하기로 결정을 본 상태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결정된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과 프로그램을 세우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만일 이 결정이 상부조직 단위에서만 이루어진 것이라면 하부조직과 현장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선전과 홍보 그리고 토론을 통해 내용을 채워나가야 한다.

이제 민주노조운동이 당면한 과제들은 대회결의문을 장식하는 하나의 문구나 구호로 남아서는 안된다. 쉴 새 없이 피부어지는 공세를 막아내는데도 힘겨운 편에 그 엄청난 과제들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반문은 성립되지 않는다. 어차피 상황은 또 변하고 자본은 공세를 중단한 채 노동조합이 체제를 정비할 기회를 따로 줄만큼 자비로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위기는 새로운 도전에 맞서 스스로를 개혁하는 자에게만 기회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